

부동산 투기 근절 적극 대응 '주목'

전주시, 지자체 최초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구성 투기세력·공직자 등 투기 여부 조사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사회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달 앞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전주시에 대응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근 국회와 청와대, 검찰, 경찰, 전국 지자체 등이 지난해부터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량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전주시에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도 지난 상반기 승진인사 심사 과정에서 승진대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 여부를 세밀히 들여다 보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는 최근 LH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온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해 전주시에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상임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은 최근

전주시에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업무추진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시가 지난해 12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린 상설 행정조직으로, 그간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펼쳐왔다. 또, 조사결과 확인된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불법행위에 대해 통보하기도 했다. 동시에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365일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에 이어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도 최근 전주시에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활한 특조단 활동을 위해 상시 수사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외에도 경남 밀양시, 김제시, 정읍시 등 전국 자치단체들도 전주시에 특별조사단 활동사항과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모든 간부공무원

및 도시개발사업 부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면서 조사대상 범위를 최대로 늘렸다. 일례로 타 시·군의 지역의 경우 주로 최근 10년까지를 조사범위로 삼은 반면, 전주시에 경우 11~15년까지 경과한 효천지구·예곡시티·만성지구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대상 공무원도 간부공무원, 신도시사업과, 생태도시계획과, 산단조성팀 등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 직원 뿐 아니라 개발정보가 공유될 여지가 있는 협의부서까지 확대했다.

이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이를 악용한 투기 행위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적발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토부·한국부동산원·광역수사대 등과의 합동조사 결과 44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시는 당시 수사 결과에 따라 1,010명에게 30여억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시는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분양권전매 ▲명의신탁 ▲중개사법위반 ▲편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19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향후에도 필요시 투기의심지역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투기 세력을 뿌리 뽑고, 공직사회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근절 등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집으로 장난치는 투기 세력과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서는 공직사회 구성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피해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보건소, 2분기 백신접종 모의훈련

정부·유관기관 참여 접종준비 시연·이상반응 대응 훈련 등 실시

전주시가 안전하고 원활한 2분기 백신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22일 전주시 예방접종센터인 화산체육관에서 정부·유관기관과 함께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이날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 경찰청, 소방서, 전주대대, 전북도, 인근 시·군 보건소 등과 함께 2분기 코로나19 백신접종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모의훈련은 실제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해 ▲접종준비 시연 ▲백신 수령 및 인계 ▲예방접종 실시 ▲이상반응 대응훈련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화이자 백신접종에 대비한 백신의 해동, 희석 등 접종 준비 시연과 함께 백신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 호소 환자를 초기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이송하는 훈련까지 점검했다. 시는 이날 훈련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다음 달 초부터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2분기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4월 첫째 주부터 화산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노인,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소 600명이 넘는 인원에 2분기 백신접종을 할 계획이다. 다만,



의출 및 이동이 곤란할 정도로 거동이 어렵거나 외부 이동 시 기저질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센터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또 이의 65~74세 노인과 학교 및 돌봄공간 종사자,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자체 기관 등에서 2분기 접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신선 소장은 "화산예방접종센터가 전북 제1호 접종센터인 만큼 표준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특히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 이후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코로나19 최일선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만500여명에 대해 1차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최명규 부시장 "28일까지 일주일간 시민 '긴급 멈춤' 주간 특별점검반 구성해 다중이용시설 강력한 현장점검 나설 것"

전주시가 좀처럼 찾아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최명규 전주 부시장은 22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을 전주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정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모임과 소모임, 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지역 방문도 중단해 주시고, 장례식이나 예식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최명규 부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총 80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꾸려 향후 1주일 간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실내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만4,592곳에 대해 강력한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모든 시설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에서는 지난 2월 피트니스발 집단 발생 이후 확진자 수가 지속 늘어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46명에 달한다.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6.5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18명으로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최명규 전주 부시장이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비대면 브리핑을 가졌다.

전주시는 이날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등 중점관리시설의 업종별 협회 대표자와 시 방역담당부서가 함께 코로나19 방역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부시장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있다"면서 "여러분의 힘을 믿고 전북도,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선미촌 빈 업소 활용 리빙랩 사업 추진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성매매집결지였던 선미촌 내 빈 업소가 팝업스토어(임시 상점)로 되살아난다.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는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억원을 들여 선미촌 빈 업소를 활용해 여행길(여성이 행복한 길)을 조성하기 위한 선미촌리빙랩 사업을 추진한다.

리빙랩(Living-Lab)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에 해법을 찾아가 시 도하는 생활실험실을 말한다.

선미촌리빙랩 사업은 선미촌 내 40여 개의 빈 업소를 활용해 창업, 팝업스토어, 문화 창작(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비영리단체 ▲여성 인력과 성 평등 활동 조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조직(팀) 등으로,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전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해야 한다. 시는 리빙랩 활동 지원을 위해 1개 팀당 3,000만원 한도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참여를 원하는 팀은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블로그(blog.naver.com/jeonju-social_ino)에서 내려 받은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다음 달 8일과 9일 성평등전주(완산구 물왕말3길 7)에 방문하거나 이메일(iv.jequity@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성평등전주 커뮤니티홀에서 진행되는 사업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팀을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과 수행 능력, 혁신성 등을 평가한 뒤 오는 16일 전주시사회혁신센터 블로그에 선정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정상택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여성 인권 침해 공간이었던 성매매 집결지가 시민주도의 선미촌리빙랩 사업을 통해 친시민적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점진적인 문화재생을 통해 지난 2000년대 초반 85곳에 달했던 성매매업소를 현재 7곳으로 줄였으며, 올해 완전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